

민주 “檢 삼짓돈, 민생과 무관… 지역화폐 예산 확보 최선”

국힘 특활비 감액 비판에 “국회 예산심의 겁박·책임 전가”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벌이는 가운데 민주당은 2일 감액 예산안을 비판한 여당에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특히 대통령실이 검찰·경찰의 특수활동비 감액을 문제 삼아 민생범죄 대응이 어렵게 됐다고 비난한 것을 강하게 반박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대구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삼짓돈이 없다고 민생이 마비되나”라며 “권력기관 삼짓돈 말고는 예비비도 예년보다 많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한준호 최고위원도 회의에서 “특별비용 예산을 삭감한다고 해서 국민께 무슨 피해가 가나”라며 “국회의 예산 심의를 겁박하고 정부의 책임도 국회에 전가하는 정권의 행태가 과연 헌법에 부합한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가 4조 8000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한 데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표는 회의에서 “코로나 이후 연간 사용된 예비비가 1조 5000억원을 넘은 예가 없다고 하는데 무려 5조원 가까운 예비비를 편성하나”라며 “이게 아무 때나 아무 용도로 꺼내 쓰겠다는 거 아닌

가”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예산은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정부·여당에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예산 협상 과정에서 2조원 규모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등 증액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열린 회의장 뒤편에 걸린 현수막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2조원, 민생돌봄의 마중물로 쓰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졌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민주당은 경제를 선순환시키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과 고교무상교육 국비 지원을 위한 민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허소 대구시당위원장도 “민주당이 국회 예결위 회의에서 통과시킨 2조원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에서 대구시민이 사랑하는 ‘대구로 페이’ 예산도 나온다”고 강조했다.

허 위원장은 “대구시민과 전 국민이 바라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2조원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지 않나”라며 “골목 경제를 살리는 데 필요한 예산에 정부·여당이 동의해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오전 대구 중구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열린 제43차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국힘 ‘채상병 사건 국정조사’ 참여키로

송석준·유상범 등 명단 제출…연내 조사 시작 전망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채상병 순직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하고 특위 위원 명단을 국회의장실에 제출했다.

국민의힘 특위 위원 명단은 송석준·유상범·장동혁·곽규택·박준태·유용원·주진우 의원 등이다. 국방위원회 소속인 유용원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7일 5선 정동영 의원을 위원장, 재선 전용기 의원을 간사로 하는 명단을 의

정상에 제출했다. 박범계·박주민·김병주·장경태·김성희·부승찬·이상식·황명선 의원이 위원 명단에 포함됐다.

예정대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가 처리될 경우 연내에 국정조사가 시작될 수 있으며, 이는 2022년 12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이후 2년 만의 국회 국정조사다.

야당이 주도하는 이번 채상병 사건 국정조사에 국민의힘이 참여하기로 한 배경에는 청문회와 국

정감사를 거쳤던 사안인 만큼 새로운 의혹이 불거질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과 함께, 야당에 일방적인 ‘공세의 장’을 제공할 이유가 없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각종 청문회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회와 진상규명 활동을 했지만, 민주당이 정쟁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시도한다”면서 “당초에 그런 이유로 부정적인 견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조사 불참을 진지하게 검토했지만, 민주당의 단독 국정조사 운영이 또 다른 기형적인 형태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진상규명이라는 국회 차원의 노력에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감사원장·검사장 탄핵안 본회의 보고

내일 본회의 표결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한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의 탄핵소추안도 본회의에 함께 보고됐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므로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지휘라인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표

결에 부쳐진다.

민주당은 앞서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으며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돼 본회의 보고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또한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이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했다. /연합뉴스

DJ 사저 보존 추진위 오늘 첫 회의

서울 마포구는 3일 구청에서 ‘고 김대중 대통령 동교동 사저 보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연다고 2일 밝혔다.

회의에는 김대중재단 관계자와 유족, 법률·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동교동 사저의 보존과 국가등록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한다.

앞서 구는 지난날 12일 서울시에 동교동 사저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재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한 데 이어 같은 달 20일에는 사저 인근 도로를 ‘김대중길’로 명명했다. /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민형배 “국가 예산으로 주 5일 경로당 급식 지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광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국가 예산의 노인정 부식 구입비 보조가 주 내용이다.

현재 경로당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지원 예산을 보조하고 있으며, 이 중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당의 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비는 국가에서 보조하는 구조다.

이 때 양곡 구입비 외 반찬, 즉 부식 구입비는 지자체 사업으로, 각 지자체 여건과 재정 상황에 따라 경로당 급식 제공 서비스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민 의원의 설명이다.



도 경로당에 대한 지원이 곧 노인의 삶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국가 책무를 방기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민형배 의원은 “지난해 대한민국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1위이다”며 “어르신들이 거주 지역에 따라 경로당 급식 지원을 받는 것은 명백한 차별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모든 어르신이 양질의 식사를 제공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정준호 “AI·딥페이크 등 성범죄 수익 몰수”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북구갑) 국회의원은 2일 “AI·딥페이크 등 성범죄 수익을 몰수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의 국회 통과 1호 법안이기도 한 이번 법안은 지난 8월 28일 발의 후 신속한 논의를 거쳐 발의 93일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제작, 카메라 등 영상촬영물, 영상을 이용한 협박에 대해서는 기존 형사처벌에 더해 범죄수익을 반드시 몰수·추징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딥페이크 영상 확산, 유령 유튜브 협박사건 등 신종 성폭력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처벌 외에 경제적 제재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준호 의원은 “딥페이크의 폐해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관련 법이 국회 1호 통과 법안이 되어 의미가 남다르다”며 “앞으로도 민생 회복과 경제정의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법안 통과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